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라

고령화 대응력지수가 뭐지?

급속한 고령화현상은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됐다.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저하와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지역성장 및 지역 발전은 지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모든 지자체들은 이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지역이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구조, 즉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인간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2~3주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2~3일 후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영향도 있겠지만 평소 운동이나 음식 섭취 등을 통해 감기에 대응하는 길항력이 자신도 모르게 축적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고령화 대응력도 이와 같은 이치다. 예컨대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그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지자체는 생산성의 감소분을 상쇄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 증가 또는 기술혁신(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투입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나타나는 정책투입에 대한 성과는 모두 고령화 대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고는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즉 정책투입)를 경제, 산업, 보건, 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령화대응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충남, 고령화 수준 높지만 노화(老)는 가장 늦은 인구구조

충남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16.1%로 이미 고령지역(7~14% 미만)으로 진입했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생산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충남지역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노인층의 부양을 위한 지출 증대로 복지예산의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 이 수치로만 보면 충남의 장래는 우울하다.

그러나 고령화 수준이 아닌 진행 속도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충남의 늙어가는 속도(노화현상)는 전국에서 가장 늦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충남이 한 살을 먹을 때 충남 보다 젊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이 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다. 즉, 1993~2013년 동안 고령화 비중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 2.2배, 부산 3.3배, 서울 2.8배 늘어난 반면, 충남은 1.8배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인구 연령층이 충남으로 유입 되어 인구구조 노화현상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충남의 인구구조상으로 볼 때 불행 중 다행이다.

충남, 고령화 대응력 전국 2위...부문 간 불균형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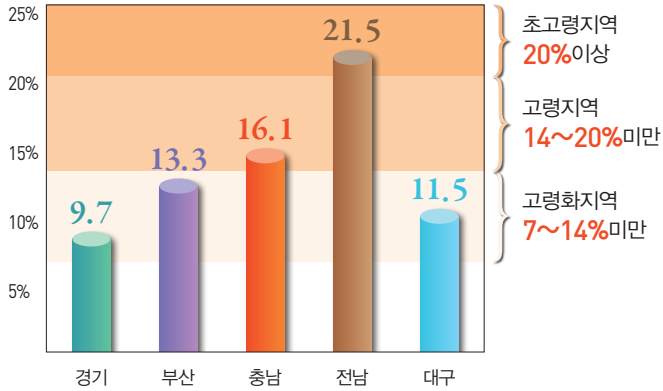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4.20으로 경기(4.38)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3.78) 3위, 대전(3.57) 5위를 차지하여 충청권 3개 지역은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유형은 경제(경제·산업) 및 생활(보건·복지) 활력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활력 지역으로 분류되어 높은 고령화대응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불균형은 상당한 수준을 나타낸다. 즉, 경제 활력 지수는 3.0으로 전국 1위이나, 생활 활력 지수는 1.20으로 7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는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했으나, 보건 및 복지 영역은 6위와 7위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제조업의 집적에 따른 활발한 생산활동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보건 및 복지 영역을 대변하는 생활 측면에서의 정책 투입에 대한 미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이 고령화대응력을 더욱 제고하려면 생활활력의 근본적인 요인인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창의 인재육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저자 _ 산업연구원 허문규

지역별 고령화율과 진행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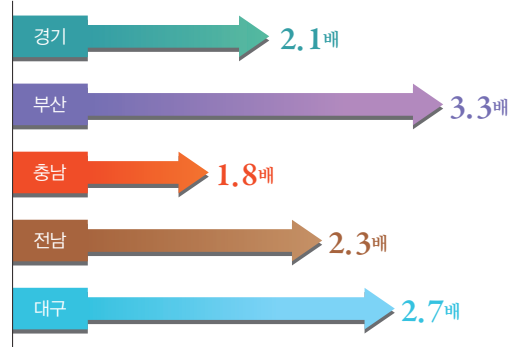
고령화율, 2013



고령화 비율은
높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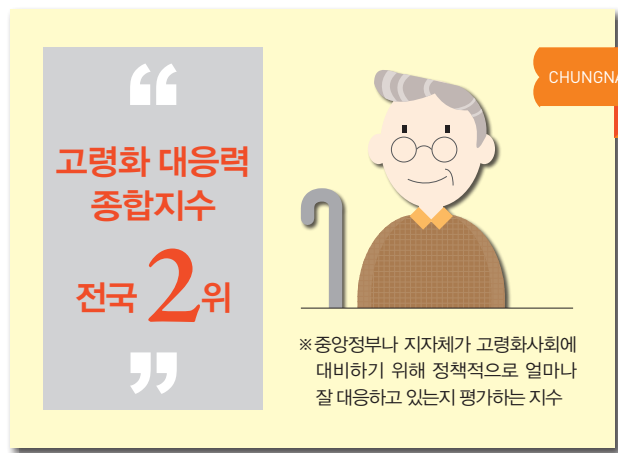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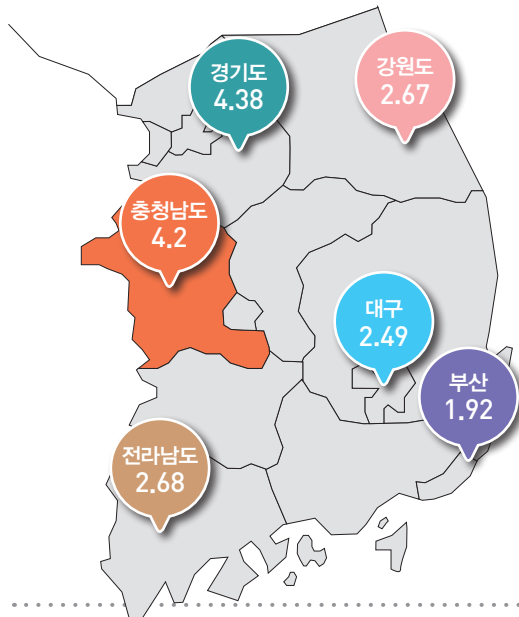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최근 20년간 고령화 진행속도, 1993~2013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자료: 산업연구원



생활활력(복지,보건의역)
1.2, 전국 7위

경제활력(경제,산업영역)
3.0, 전국 1위

